



보도시점 2026. 4. 14.(화) 14:00 배포 2026. 4. 14.(화) 11:00

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, 해외 파견 재경관들과 영상회의 개최, 중동상황에 대한 주요국 동향 적기 보고 등 당부

- 가격안정화, 공급관리 및 에너지 절약 등 주요국 정책 사례 점검 -

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4.14일(화) 09:00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관 영상회의를 주재하였다. 재경관은 현재 13개국, 14개 공관*에 파견되어 주재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재정경제·금융 분야 협력, 주요 정책 동향 정보 수집 등 대외업무를 지원하고 있다.

* 미국, 중국, 홍콩, 일본, 인도네시아(ASEAN), 베트남, 태국, UAE, 프랑스(OECD/파리), 벨기에, 그리스, 독일, 영국

이번 재경관 회의는 중동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에너지 및 원자재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주요국의 동향 및 정책 대응 사례를 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다.

재경관들은 원자재 가격·수급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주요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가격 안정화 정책, 수급 안정 대책 등 소개하였고, 이에 허장 2차관은 “앞으로도 재경관 네트워크를 통해 주요국의 동향 및 정책사례를 신속히 보고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정부는 앞으로도 주요국 대응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정책에 적용가능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,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·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	책임자	과 장	최지영 (044-215-7610)
		담당자	사무관	김승환 95ksh@korea.kr
			주무관	이민식 sik6437@korea.kr

참고

주요국 대응사례 (재경관 보고자료)

◇ 주요국은 중동전쟁 대응을 위해 ¹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, ²가격 안정화 정책, ³수급 안정화 정책 등 추진중

1 **비상 대응체계** 주요국 대부분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위기에 즉각 대처하기 위한 비상 대응체계 구축·운영

【 주요국 사례 】

- (日) 중요물자 총괄책임자로 경제산업성 아카자와 대신 임명(3.30일) 및 중요물자 담당 컨트롤 타워 TF* 발족(3.31일)
* 내각관방, 후생노동성, 경제산업성, 에너지청 국토교통성, 환경성 등 고위 간부 참석
- (佛) 전쟁 발발 직후부터 경제부 장관 주재 일일 비상상황 대응반 가동·운영

2 **가격 안정화 정책** 주요국은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¹가격 상한제, ²유류세 인하, ³취약계층 지원, ⁴관리·감독 강화 등 실시

1 (가격 상한제) 가격 상한제 실시 및 민간의 자발적 협조 등 요청

【 주요국 사례 】

- (日) 휘발유 소매가격을 리터당 170엔 수준 유지 위해 정유사에 보조금 지급(3.19~)
- (中) 발개위는 정제유 가격 임시조정 조치를 통해 휘발유·경유 가격 인상폭 조정
- (獨) 주유소 가격 인상은 하루 1회, 정오에만 가능하도록 규제
- (佛) 정부-업계 가격 안정화 방안 논의(TotalEnergies(佛 최대 정유업체) 가격 상한제 도입)

2 (유류세 인하) 유류세 및 부가가치세 인하 등 세제지원*

* (이탈리아, 독일) 유류세 인하 (스페인, 폴란드) 연료 부가가치세 인하 등

3 (취약계층 지원)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저소득층, 취약업종 등에 대해 재정지원

【 주요국 사례 】

- (英) 난방유 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 농촌 가구를 선별 지원을 위해 약 5,300만 파운드 규모의 에너지 비용 지원 대책 발표(3.16일)
- (佛) 일부 취약업종(운송업, 어업, 농업) 한정 유가 관련 재정지원(운송업은 보조금 지원, 어업은 연료비 환급, 농업은 소비세 면제 등)

④ (관리·감독 강화) 가격 담합, 폭리 등에 대한 조사 등 실시

【 주요국 사례 】

- (美) 美 법무부는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을 틈타 가격 조작을 한 혐의로 주요 비료 생산업체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 착수 (3.10일)
- (獨) 중동전쟁 여파로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자, 독일 정부는 가격형성 구조 점검을 위해 BP, 쉘 등 주요 정유사 소환 및 회의 개최 (3.16일)
- (佛) 佛 경쟁당국 전국 주유소 대상 약 630건 이상의 집중 단속 시행, 가격 폭리 등 부정 사례를 적발(전체 주유소의 약 5% 수준), 제재 예고

③ [수급 안정화 정책] 수급 안정화를 위해 ①수입 다변화, ②국내생산, ③수출제한, ④비축유 방출, ⑤에너지 절약 등 실시

① (수입 다변화)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유, LNG, 석유화학제품 (나프타 등) 수입 다변화 추진

【 주요국 사례 】

- (日) 나프타를 중동 외 지역(미국·남미 등) 수입 확대 추진
- (인니) 원유를 러시아로부터의 G2G 직수입 추진
- (태국) 브루나이(원유), 호주(LNG) 등과 긴급 장기 공급계약 추진

② (국내생산) 일부 품목의 국내생산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 실시

【 주요국 사례 】

- (美) 폐쇄 예정이었던 인디애나주와 워싱턴주의 노후 석탄 발전소에 대해 6월 중순까지 긴급 가동 명령 (3.16일)
- (英) CO₂*확보를 위해 가격경쟁력 상실로 중단된 바이오에탄올 생산공장인 Ensus 3개월 재가동을 위해 1억 파운드 투입 결정 (3.26일)
 - * 중동사태로 가스가격 폭등 → 가스를 많이 쓰는 유럽 내 비료공장 연쇄 타격 → 비료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막대한 부산물인 CO₂ 생산 급감 → 英 CO₂ 수입 급감 → 바이오에탄올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CO₂를 확보 필요성 ↑ → 英내 생산 중단된 바이오에탄올 공장 재가동 결정
- (佛) 경제부는 佛 2위 정유업체 Gravenchon 정유공장에 '신속한 일시 증산' 요청

③ (수출제한) 일부 국가들은 공급망 위기 품목에 대해 수출할당, 자국내 우선 공급 등 수출제한 중

【 주요국 사례 】

- (中) 정제유는 수출할당 품목(정기적·비공개적으로 할당량 관리)
요소는 그간 수출기업별 쿼터 배정했으며 현재 수출제한 중(쿼터 未배정)
- (태국) 가솔린, 항공유 등 주요 석유제품 수출을 즉시 중단하는 총리령 발표(3.6)

④ (비축분 방출) 국제에너지기구(IEA) 약 30개 회원국이 총 4억 배럴* 비축유 방출 결의(3.11일)

* 주요국 방출량(단위: 배럴): (美)1억7,200만 (日) 7,980만 (캐)2,360만 (韓)2,246만

⑤ (에너지 절약) 재택근무·화상회의 활성화, 공무출장 최소화, 대중교통 이용 권장 등 에너지 절약 정책도 병행*

* IEA 권고(3.20일): ①재택근무 시행, ②고속도로 제한속도 10km/h 하향 조정, ③대중교통 장려, ④대도시 자가용 요일제, ⑤카풀 확대, ⑥효율적 운전, ⑦운송용 LPG를 휘발유로 전환(조리용 LPG 확보), ⑧대체수단이 있는 경우 항공여행 자제, ⑨현대적 조리 방식으로 전환(LPG→전기 등), ⑩석유화학 원료 효율성 제고(LPG 확보) 등

【 주요국 사례 】

- (EU) 재택근무 권고, 카풀 및 대중교통 이용 장려 등(EU 에너지담당 집행위원)
- (베트남) 재택근무 권고, 공공부문 출장 자제, 대중교통 사용 활성화 권고
- (인니) 공무원 금요일 재택근무, 공공부문 출장 자제

◇ 우리나라도 선제적으로 ①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, ②가격 안정화 정책, ③수급 안정화 정책 등을 신속히 추진중*으로

○ 앞으로도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한 대응 보완 추진

* ①(대응체계) 대통령 주재 '비상경제점검회의' 개최

②(가격 안정화)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, 유류세 인하, 취약계층 지원 등

③(수급 안정화) 수입 다변화, 비축유 방출 동참,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에너지 절약